

광주·전남 현안 법안 ‘제2라운드’... ‘표류’ 4대법 처리 주목

마지막 정기국회서 5·18관련 3법만 우여곡절 끝 통과
아특별·군공항특별법·한전공대법·여순특별법 계류중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5·18 관련 3법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도입한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지역 현안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법안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5·18 역사 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또 5·18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에,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암매장했던 가해자들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은 최대 3년에서 1년 늘어났고 5·18 관련 진상조사 시기와 지역 범위를 넓혔다.

이날 국회가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이제 나머지 지역 현안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아특별법과 군공항특별법, 한전공대법, 여순특별법 등이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간 충돌로 관심 밖에 있다.

현재 5개 쟁점법안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경찰개혁법이 모두 통과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3건이 남아 있다.

국회의원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다른 법안의 심의 및 처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특별법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은 현재 아특별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공항 특별법’도 현재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서삼석(전남 무안·영암·신안) 의원이 다른 내용으로 각각 발의해 병합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1월10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처리가 녹록지 않다.

한전공대법과 여순 특별법도 아직 진척이 없다. 현재의 아특별법은 내년부터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는 학생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선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최소 내년 3월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학생 선발이 가능해진다.

3월 이후 특별법이 통과되면 교사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수업받을 학생은 없어 ‘반쪽 개교’가 불가피해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아특별과 여순특별법

등 현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문화전당, 한전공대 운영이나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내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강력범죄 잦았던 신안에
2022년 경찰서 들어선다

신안경찰서 건립이 석달 뒤 본격화된다. 오는 2022년 말 완공 예정으로 섬 지역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신안군 섬 지역 중앙부인 암태면 단고리 974-1번지 일원에 신안경찰서를 신축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3월 착공해 2022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부지 면적은 1만4214㎡, 건물 규모(9088㎡)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다. 총 사업비는 219억 원이다.

신안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었다. 그동안 신안 치안은 목포경찰서가 담당했다. 섬 880곳 중 72곳은 유인도이고, 808곳은 무인도여서 주민·여행객(한해 관광객 180만여 명)의 안전을 지키고,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등 다양한 치안 활동이 필요한 지역인 점도 건립 필요성을 키웠다. 기동취재본부

‘전방위 압박’ 광주 군공항 56년 만의 이전 속도 불나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한 전투기가 상공격전을 펼치고 있는 장면.

광주 군(軍)·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구성되고, 광주시가 ‘선(先) 군공항 해법, 후(後) 민항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전남 시민권익위원회의 ‘민간·군 공항 이전 관련 정

‘선 군공항 해법, 후 민항 이전’ 공식화
광주·전남·국토부·국방부 ‘4자 협의체’
특별법 개정·군소음보상법, 대구 선례

책권고’에 대한 입장문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되,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부 이전’을 원칙론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시민 다수는 민간공항의 광주 존치를 원하지만,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군공항은 광주에 남기고 민간공항만 옮기는 건 상생이 아니다”며 “군공항 이전 로드맵 확정, 후 민간공항 이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시기는 국토부와 국방부, 시

와 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당장 내년이라도 민간공항을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시장은 내다봤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4자 협의가 키워드이자 담보 상태에 놓인 공항 이슈를 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4자 논의구조도 군공항 이전에 또 다른 지렛대다.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4자 협의체가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울타리 안에서만 진행돼온 ‘켓바퀴 논의’의 틀을 깨고 국토부와 국방부가 논의 테이블에 동참하게 돼 공동 연구와 법률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56년 만의 이전을 추진중인 군공항과 관련한 이전대상 지역의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도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지자체와 주민들의 공항 유치전에 힘입어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점도 또 다른 자극제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항 갈등과 이슈의 핵심은 결국 국영 군공항 이전인데, 난제로만 여겨져온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분과 절차적 당위성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관련 기관간 소통은 물론 중앙 부처와 정치권의 협조, 법률적 손질 등이 차질없이 담보된다면 군공항 이전도 내년 중 가시적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5조 7480억원에 달하는 군공항 이전사업비가 풀려 10조원대 생산유발·부가가치와 5만7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더 없는 활성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 송정·도산동, 서구 삼부동, 남구 대촌동 등 10개 동 주민 30만 명의 군소음 피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